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남 상 호** · 임 병 인***

논문초록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및 Wolfson 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소득·소비분배구조 추이와 양극화의 진전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포 형태와 Wolfson 양극화 지수에 의하면 1995~2005년 기간 중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감소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 둘째, 지니계수 분석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상태가 고착화되고 있었지만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은 오히려 불평등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다. 셋째, 10분위 분배율과 Wolfson 양극화 지수에 의하면 소득양극화는 심각하게 악화된 채로 고착화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출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기간에만 일부 변화가 있었을 뿐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아 지출 측면의 양극화 심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핵심 주제어: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양극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31, D63

* 이 연구는 제1저자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으로 재직 중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도움말을 주셨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장동구 실장, 김대수 실장, 이진수 박사, 노용환 박사, 그리고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도와준 신광수, 엄상민, 이미란, 조진희씨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모든 오류는 필자들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 제1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 연구위원, e-mail: johnnam@chol.com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billforest@hanmail.net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양극화해소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부터 증산층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부유층과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시작되었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양극화현상이 발생하였다. 중소기업과 전통제조업이 대규모로 퇴출되면서 산업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양극화까지도 등장하였다. 이런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취약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리면서 주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소득이 함께 하락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음에도 국내의 소득분배관련 연구들은 주로 지니계수와 같은 소득불평등도지표를 통한 실증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해결과제라고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극화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흔치 않은 편이다. 즉, 소득양극화보다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준영·임병인, 2001; 최희갑, 2002; 이정우·이성립, 2001; 박성준, 2000; 김진영, 2002 등). 한편 소득양극화 지표에 초점을 맞춘 국내연구는 신동균(2005), 신동균·전병유(2005), 임병인(2005), 조성원(2005), 민승규(2006) 등이며, 분석 내용에서 소득양극화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준영·임병인(2001), 최바울·김성환(2003)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소득양극화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 소비 측면에서의 양극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래 생애주기 및 항상소득가설로부터 얻어지는 함의는 개인의 소득수준은 소비수준보다 더 많이 변동하며, 청년기와 노년기에 있어서 소비수준이 소득수준보다 높아서 소득의 경우보다 소비의 경우에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Johnson et al., 2005). 또 설문조사에서 소득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소득이 실제소득보다 후생수준을 더 잘 나타내는데, 특히 횡단면 자료에서는 항상소득을 포착하기 어렵지만 소비는 항상소득의 좋은 대용변수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소비측면에서 분배구조 및 양극화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구조에 대하여 소비지출의 불평등도와 양극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양극화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양극화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둘째,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교차상관계수를 통하여 살펴보고, 통계청의 5분위 배율이 아니라 10분위 배율과 Wolfson 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셋째, 소득 뿐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의 양극화 진행여부를 확인해보고 지출구조가 소득구조와 다른 이유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서론에 이어 기존연구와 분배구조 관련 지표들을 소개하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양극화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양극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중간계층의 범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사용 자료와 측정방법, 그리고 측정결과들을 소득, 소비의 순서로 논의한다. 이어서 소득 및 지출의 불평등도와 10분위 분배율 및 양극화 지수 간의 회귀방정식의 추정 등을 통해 분배구조 괴리의 원인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기존 연구와 분배구조 관련 지표의 의의

1. 기존 연구

김준영·임병인(2001)은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0분위별 소득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평균소득 구성비 중 9, 10분위가 차지하는 소득구성비가 경제위기 이전에는 평균 35%인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평균 37%로 상승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에 고소득 계층인 9, 10분위로 소득이 집중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하위 4개 분위가 차지하는 소득구성비는 경제위기 이전의 평균 23%에서 경제위기 이후 평균 20%로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몫이 감소했음을 확인하였고, 결국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분위 분배율 수치가 1997년 대비 27% 이상 하락하였음을 밝

히고, 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격감하는 소득의 양극화 조짐을 수치로써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최바울 · 김성환(2003)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여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는 그 이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들은 소득불평등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하여 고소득층의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이 소득분배 악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가구소득의 경우 1998년의 소득 10분위 분배율 수치(0.302)가 1997년의 0.331보다 하락하여 소득집중도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상위계층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증가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비양극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소득양극화의 추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신동균 · 전병유(2005)는 Esteban and Ray(1994)가 개발한 양극화지수를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적용하여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총가구소득으로 계산된 양극화지수는 지니계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집단 내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 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균 · 전병유(2005)는 본 연구와 달리 소득측면에서만 양극화를 논의하고 있다.

임병인(2005)은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양극화의 존재와 그 심각성, 더 나아가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당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성원(2005)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소득 5분위 배율에 대한 1변수(uni-variate) 시계열모형을 설정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구조변화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득 5분위 배율로 나타난 빈부격차의 확대가 경기순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 소멸’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란 중간소득층 인구비중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이 양극화는 소득불평등과는 다른 개념인데 그 이유는 양극화의 개념이 일반적인 불평등 척도가 만족해야 하는 피구-달턴 공리¹⁾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쌍봉형(twin-Peaks) 분포는 균등분포보다 평등한 분포일 수 있으나 더 양극화된 분포이다. 평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mean-preserving) 소득을 재분배하면 로렌츠 곡선이 45도선에 더 가까워져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 수 있지만 분포가 쌍봉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극화된 분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소득불평등 지수로는 양극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단순하게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는 방법은 중위소득(median)으로 정규화된 소득을 이용하여 특정범위에 속하는 인구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Thurow(1984)는 중위소득의 75~125%, OECD는 중위소득의 50~150%, 그리고 미국 센서스국은 50~200%를 중산층 또는 중간계층으로 보고 있다.²⁾ 그런데 이 방법은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중산소득 인구비중의 감소 혹은 양극화의 심화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중간소득계층을 나타내는 인구비중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간소득계층의 인구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태는 중간소득계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5~2005기간의 경상소득 분포를 중위소득으로 표준화하여 2005년의 소득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양극화의 진행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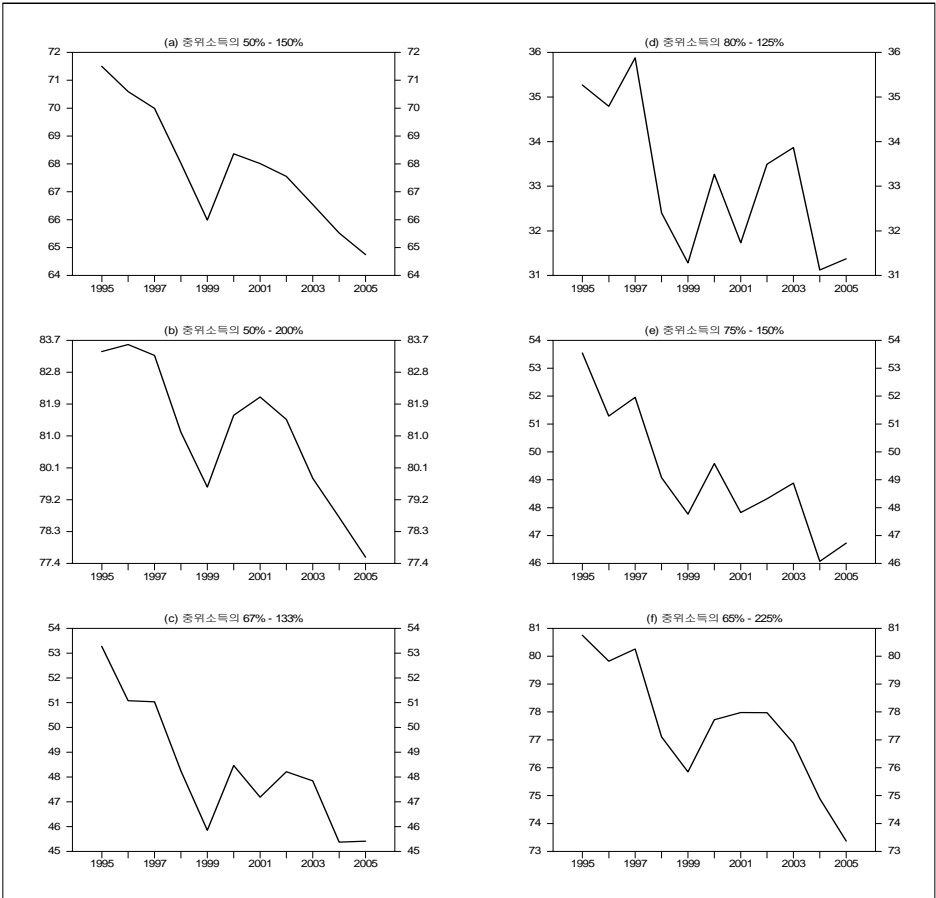
1) Pigou-Dalton 公理란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이 발생하였을 때 소득불평등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公理는 불평등지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이다.

2) 연구자에 따라 중산층과 중간계층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홍두승, 2005), 여기서는 편의상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간소득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1995년과 2005년 두 해의 소득분포를 평활화한 다음 그린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 1(중위소득) 부근에서 2005년의 밀도가 과거보다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림 1〉 인구비중 (경상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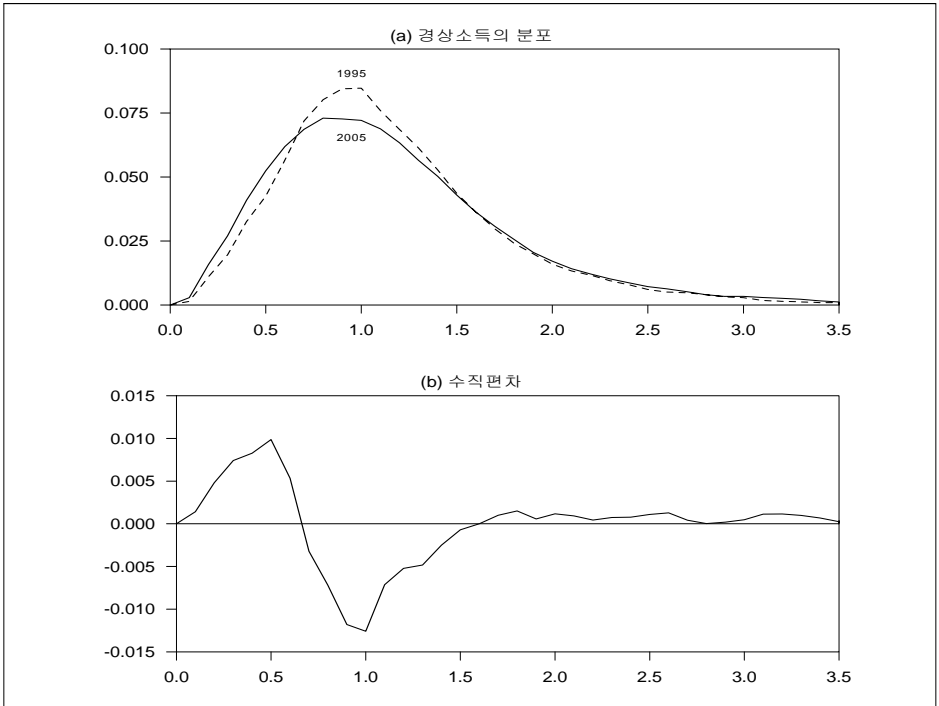


자료: 『(도시) 가계조사』 원자료 중에서 근로자가구만을 추출하여 계산하였음.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160%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가구의 규모는 표본전체의 약 5.5%에 해당한다. 감소한 가구 중 약 2/3는 저소득층으로, 그리고 1/3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하였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위소득 가구비중이 감소하는 외에도, 감소한 가구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축소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 70~160%를 중간소득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³⁾

〈그림 2〉 중산층 축소와 양극화의 진전



주: 중위소득(가로축의 1.0) 부근에서 가구비중이 줄어들면 중산층이 축소된 것이며, 이렇게 감소한 가구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분산되는 것이 소득의 양극화이다.

양극화의 학술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구체적인 측정방법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다.⁴⁾ 그러나 1990년대 초 Esteban and Ray(1994), Foster and Wolfson(1992)에 의하여 양극

3)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위소득의 70%~160%는 인구비중 30%~80%에 해당하며, 소득 기준 하위 30%가 대략 수입액과 지출액이 같은(break-even) 점이라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4) 이 때에는 양극화지수로 사용된 척도가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분위분배율도 대표적인 소득점유비율 척도중의 하나이다.

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체계화되었다. 우선 Esteban and Ray(1994)는 불평등척도에 관한 피구-달턴 공리를 만족하는 양극화 지수를 유도하였다. 반면 Foster and Wolfson(1992)은 소득분포의 형태를 이용하여 양극화에 관한 서수적 척도를 고안하였는데, 소득분포의 형태가 중위소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Wolfson(1994)은 중산층의 소멸과 양극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어, 중산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의 거리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Wolfson의 양극화 지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할 수 있다. 우선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로렌즈곡선으로부터 양극화곡선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로렌즈곡선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점에서 수직선을 그을 때 로렌즈곡선과 교차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이 교차점에서 그은 접선이 바로 양극화곡선이다. 다음으로 완전평등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45도 선과 양극화곡선 사이의 면적에서 45도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을 빼면 잠정적 양극화지수(W^*)가 얻어진다.

$$W^* = (T - 0.5 \cdot \text{Gini}) / (\text{Me}/\mu)$$

여기서 Me는 중위수, μ 는 산술평균, Me/μ 는 50%인구 백분위수에서 로렌즈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이다. 이 값에 4배를 해 준 것이 Wolfson의 양극화 지수이다.

$$W = 4W^* = 2(2T - \text{Gini}) / (\text{Me}/\mu)$$

Wolfson의 양극화지수는 중위소득계층과 다른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이 방법은 중산층의 정의가 달라지더라도 양극화에 관한 서수적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10분위 분배율로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측정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text{분위 분배율} = \frac{\text{하위 } 40\% \text{의 소득(지출)점유비율}}{\text{상위 } 20\% \text{의 소득(지출)점유비율}}$$

이 수치는 이론적으로 한 사회가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 있을 때 ‘2’가 된다. 분배율 수치가 2보다 작을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득격차가 커지면 10분위 분배율은 지니계수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Ⅲ. 우리나라 소득 및 지출의 분배구조 추이

1. 사용자료

통계청은 2003년 이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관련 가계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분기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월 평균 7,300 여 가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응답률은 약 8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약 15%의 무응답 가구를 시도·가구구분·가구원수 등을 기초로 동일한 특성⁵⁾을 가진 응답가구 중에서 중복-대체(imputation) 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복-대체 방법은 한 가구의 응답이 중복되어 표본에 포함되므로 추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외에도 모분산을 과소추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 1995~2002년 분기 원시자료와 『가계조사』의 2003~2005년 분기 원시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자가구들의 소득 및 소비와 관련된 분기자료와 연간자료 모두를 이용하였다.⁷⁾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의 분배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은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인데, 각 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자료 추출 및 지표작성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수지 항목의 유실치(missing value)들을 삭제하였다. 둘째, 동일한 가구의 조사자료가 중복된 것을 없애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가구들의 각 항목별 조사값을 평균한 뒤 가구번호로 식별하여 단일가구로 일치시켰다. 분위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분위를 구분하였다. 소비지출의 10분위분배율 역시 소득기준 분위들에 속하는 가구들이 지출한

5) 구체적으로 가구구분은 사무직·생산직·자영업·무직의 4가지로, 그리고 가구원수는 2인, 3~4인, 5인 이상의 3가지로 분류된다.

6) 김재광 외(2004)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대체 방법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가중치조정법을 통한 단위 무응답 처리법을 논의하고 있다.

7)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준, 2000).

금액으로부터 계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양극화가 소득불평등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로 소득분배구조를 측정하였는데, 표본추출 가중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였다(성명재, 2001).⁸⁾

$$G_b = \frac{1}{\mu_b} \sum_{i=1}^n \sum_{j>i} (Y_i - Y_j) p_i p_j$$

단, μ_b : 세전평균소득, Y_i, Y_j : i, j 가구의 세전소득,
 p_i, p_j : i, j 번째 표본의 추출가중치

〈표 1〉 『(도시)가계조사』의 조사항목

총 수 입	소 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총 지 출	가계 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사업 및 부업소득				가구가사	
		재산소득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기타 수입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등		비소비지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기타 수입	자산 감소	예금인출, 보험금수령, 유가증권 및 부동산 매각	기타 지출	자산 증가	저축 및 저축성보험, 유가증권 및 부동산 매입			
	부채 증가	월부 및 외상, 빌린 돈		부채 감소	빌린 돈 상환, 월부 및 외상 갚음			
전월이월금			월말현금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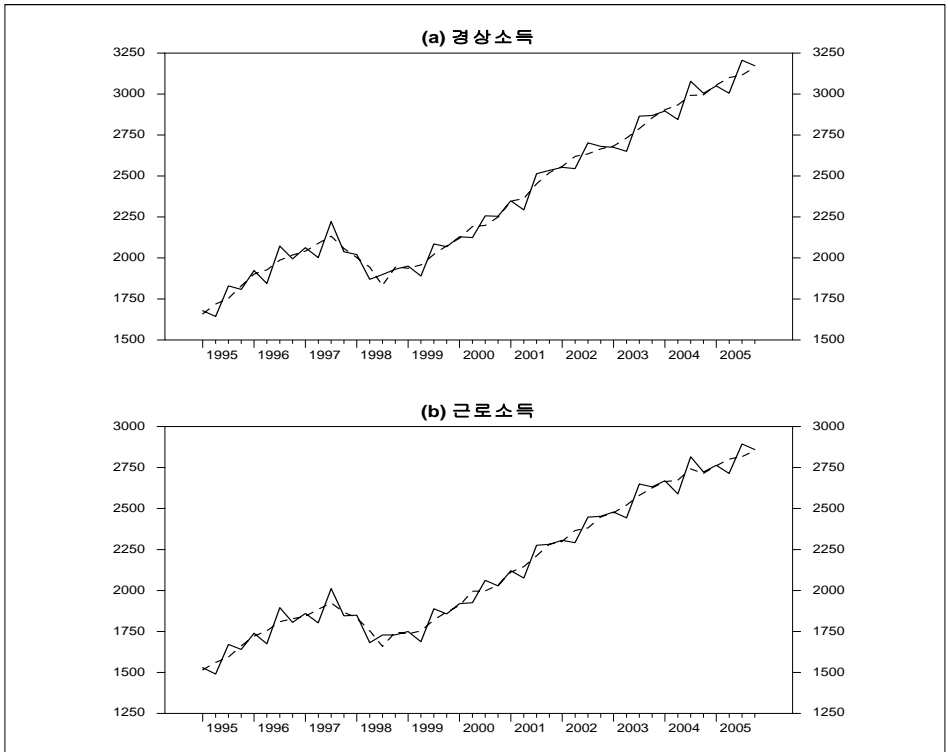
출처: 강성호·임병인(2005).

8) 이와 같이 상대적 소득격차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소득서열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2. 항목별 평균금액 추이

분석에 앞서 소득과 소비의 추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항목을 분기별로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 및 〈그림 4〉 참조). 경상소득은 가구가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소득 및 부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표 1〉 참조). 경제위기가 촉발된 1997년 4분기 직전인 1997년 3분기에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2,222천원, 2,012천원이었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경상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1998년 2분기에 최저수준인 1,870천원, 1,682천원으로 하락하였다. 두 유형의 소득은 1998년 2분기 이후에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경상소득은 2001년 1분기가 되어서야 경제위기 직전 분기인 1997년 3분기 소득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2000년 3분기에 1997년 3분기 소득수준으로 회복하

〈그림 3〉 경상·근로소득(평균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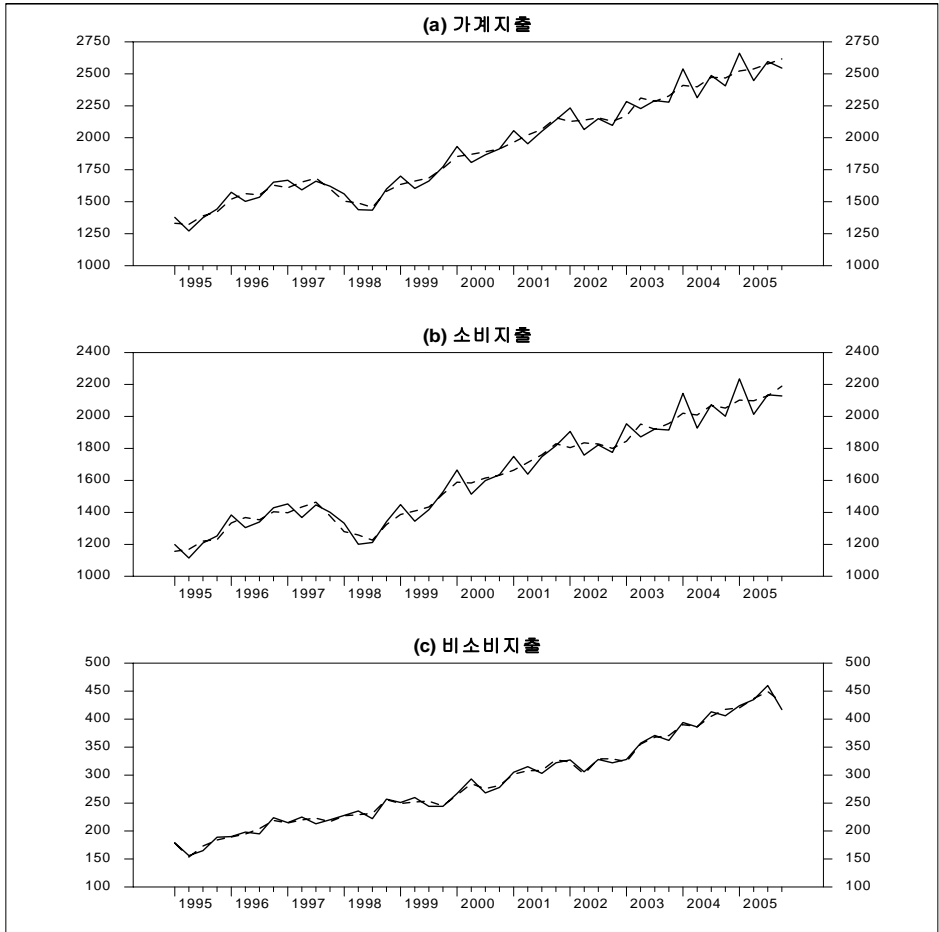


주: 실선은 원계열, 점선은 계절조정계열인데, 계절조정은 EViews 5.1의 X-12를 이용하였음. 세로축의 단위는 천원임.

였지만 4분기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경상소득과 마찬가지로 2001년 1분기 이후부터 비로소 1997년 3분기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경상 및 근로소득 모두 분기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 3〉 참조).

다음으로 지출항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역시 경상소득 및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 3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경제위기 이전의 최고 지출금액은 두 유형의 지출에서 모두 1997년 1분기인데, 가계지출은 1,667천원, 소비지출은 1,453천원이었다.

〈그림 4〉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평균금액) 추이



주: 실선은 원계열, 점선은 계절조정계열이며, 세로축의 단위는 천원임.

두 유형의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것은 가계지출은 경제위기 촉발 이후 3분기가 지난 1998년 3분기에 최저수준인 1,434천원을 시현한 후 점차 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지출은 가계지출보다 한 분기 빠른 1998년 2분기에 1,201천원으로 최저수준에 이른 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의 지출수준을 회복한 분기는 가계지출은 1999년 3분기, 소비지출은 가계지출보다 한 분기 늦은 1999년 4분기였다. 이는 소비가 소득보다 회복기간이 빨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 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지출과 경상 및 근로소득은 최저수준에 이른 시기가 동일하였지만 가계지출은 한 분기 늦게 최저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 촉발 이전 분기 수준을 초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지출항목이 훨씬 빨랐다. 한편, 소득 및 지출금액의 하락정도를 1997년 3분기 수준과 최저수준을 비교해보면, 경상소득은 16.3%, 근로소득은 16.2% 감소하였음에 반해, 가계지출은 13.0%, 소비지출은 15.9% 감소하여 소득에 비해서는 감소정도가 다소 낮았다.

소득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소비의 시차상관계수를 살펴본다.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을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근로소득(LL_{t-j})과 소비지출(CE_t)의 교차상관계수(전기간)

시차(j)	0	1	2	3	4
$Cor(LL_{t-j}, CE_t)$	0.7657	0.4948	0.1156	-0.1365	-0.3362
시차(j)		-1	-2	-3	-4
$Cor(LL_{t-j}, CE_t)$		0.8077	0.7612	0.5321	0.2755

주: 원계열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로 계산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5:1~2005:4임.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의 동시적 상관계수는 0.7657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상관계수의 최대값은 역시차(逆時差) -1에서 0.8077로 나타나는 외에도 역시차 -2에서도 0.7612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표본에 있어서는 소비지출이 근로소득에 1-2분기 선행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소득과 소비의 분배구조 및 양극화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통적인 소비이론에 의하면 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고,

과거 소득이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소비의 시차상관계수로 본 소비지출의 선행성을 설명하는 한 가능성으로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즉, 신용카드로 소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소득으로 상환하는 형태이며, 이는 실제로 위기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부채를 추후에 계속 소득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며, 저소득층에서는 점차적으로 저축률의 하락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것이 소득과 지출의 분배구조를 괴리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3. 소득분배구조

(1) 소득불평등

경상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및 Wolfson 양극화지수는 <부표 1>에 나타나 있다. 경상소득 분기별 자료의 경우 경제위기가 촉발된 분기인 1997년 4분기의 지니계수는 0.2636으로 3분기의 0.2740보다 낮으며, 1998년 3분기에 비로소 0.2977을 시현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 잠시 개선되었다가 1999년부터 0.29를 넘는 시기가 3개 분기 이상 연속하여 나타나 구조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2년 4분기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불규칙적인 편차는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분기 연속해서 지니계수가 0.29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김준영·이광호(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⁹⁾

(2) 소득양극화

다음으로 경상소득의 10분위 분배율을 살펴본다. 경상소득은 경제위기 이전의 일부(즉, 1996년 1분기와 1997년 1분기)를 제외한 기간에서는 모두 10분위분배율 값

9) 본 연구는 분기자료를 사용한 김준영·이광호(2004)의 분석대상기간에 2003년과 2004년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니계수의 추세를 그려본 결과 김준영·이광호(2004)에서 보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소득불평등상태가 구조화되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0.6을 넘고 있다. 이는 하위 40% 계층의 소득이 상위 20% 계층 소득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수치가 경제위기 직전 분기인 1997년 3분기에는 0.6205이었으나 경제위기가 촉발된 시기인 1997년 4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줄어든 0.6394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1분기에는 직전 분기에 비해 16.7%나 떨어져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 이후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양극화가 특정 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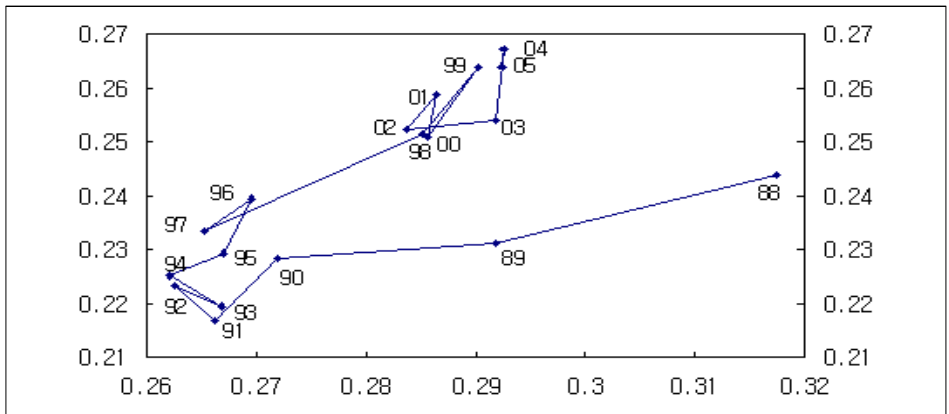
이제 Wolfson 양극화 지수를 통해 양극화 추이를 살펴본다. <부표 1>의 양극화 지수를 보면 1997년 4분기까지 뚜렷한 추세가 없지만 1997년 4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0.26이상까지 올라가는 등 그 이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4년 이후에는 0.27이 넘는 값이 연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해졌으며 이후로도 계속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는 불평등 정도가 악화되고 그 악화정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양극화 정도 또한 악화되며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득불평등도지수와 소득양극화지수의 관계

위에서 이미 두 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두 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5>와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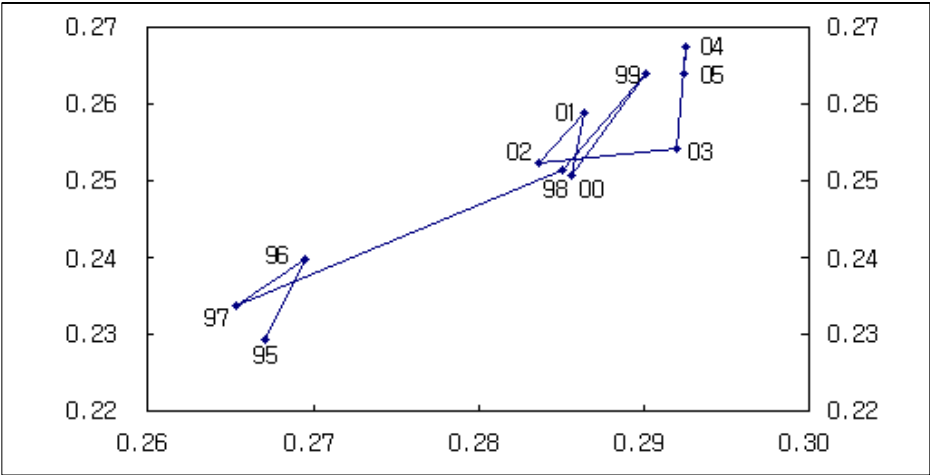
<그림 5> 지니계수와 Wolfson 지수와의 관계



주: X축은 지니계수이며 Y축은 Wolfson 양극화 지수임.

〈그림 5〉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지니계수와 Wolfson양극화지수를 X-Y축에 함께 나타낸 것이다.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다시 악화되고 있다. 〈부표 1〉에 따르면, 불평등이 가장 크게 개선된 시기는 1988~1991년까지였고,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기간(예를 들어 1996~1997년 및 2001~2002년)도 있었음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불평등이 특히 악화된 시기는 1997~1999년이었던 반면, 양극화가 심화된 기간은 1997~1999, 2003~2004년 등이었다. 또 양극화가 완화된 기간은 1990~1991, 1999~2000, 2004~2005년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2004년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가 모두 악화되어 자칫 이전연도와 또 다른 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두 지수는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상관계수 0.6817). 〈그림 5〉를 보면, 두 개의 밀집구간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990년에서 1997년까지 총 8년간, 다른 하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8년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기존 연구와 같이 소득불평등도에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조성원, 2005; 김준영·이광호, 2004). 동일한 논리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소득양극화지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6〉 지니계수와 Wolfson 지수와의 관계



주: X축은 지니계수이며 Y축은 Wolfson 양극화 지수임.

〈그림 6〉은 〈그림 5〉에서 보인 분석대상기간을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95년부터 2005년까지로 좁혀 총 11년간의 연간자료만으로 그린 것이다. 1996년은 1995년 대비하여 두 지수가 모두 악화되었고, 1997년은 1996년에 비해 두 지수 모두 개선되었고, 1998년이 1997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두 지수가 악화된 후 한번도 1997년도 수치에 접근하지 않아 〈그림 5〉에서 확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이후 전년 대비 악화 및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1999년은 악화, 2000년은 개선, 2001년은 악화, 2002년은 개선, 2003년은 악화, 2004년은 악화, 2005년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정확하게 1년마다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000년에는 두 지수가 함께 1998년 수준 가까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1년에는 양극화가 다시 심화된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2000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양극화지수와 소득불평등도지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지출의 분배구조

(1) 지출불평등

소비지출 기준으로 살펴본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Wolfson 양극화 지수는 〈부표 1〉에 수록되어 있다. 우선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세와는 판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지출의 경우 경제위기가 촉발되기 직전 분기인 1997년 3분기의 지니계수가 0.1946인데, 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지출의 불평등정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1998년 3분기 이후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고착되고 있음에 반해 지출불평등도는 오히려 개선 또는 불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출항목별 평균금액의 분석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2) 지출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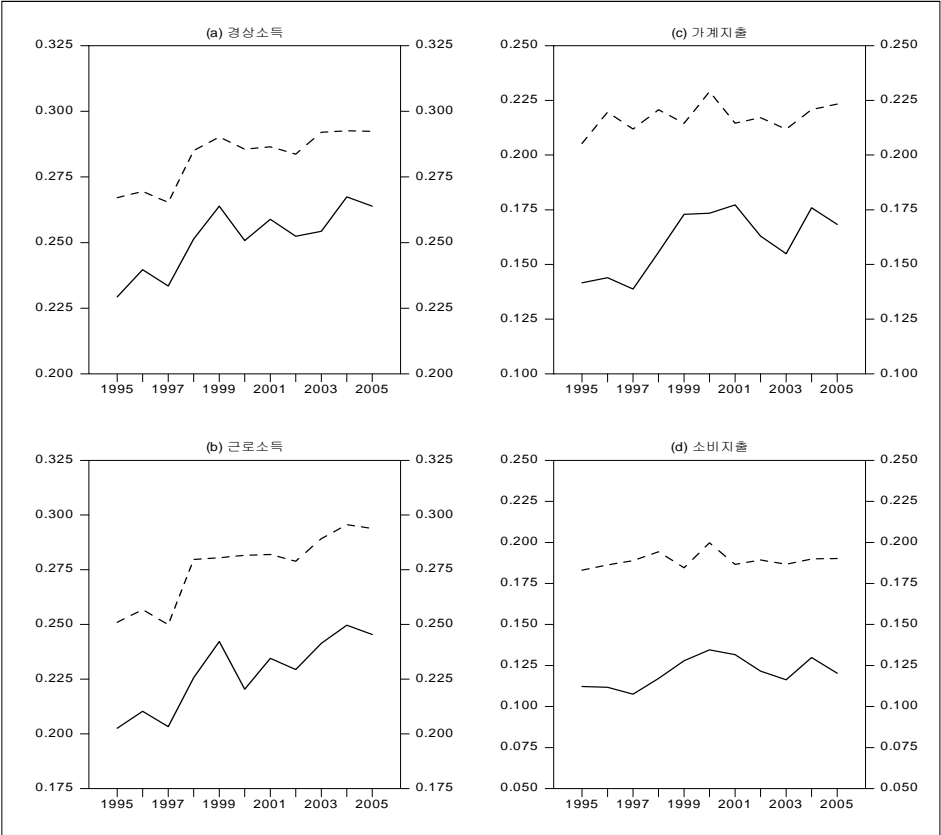
지출의 경우 10분위 분배율과 Wolfson 양극화 지수 모두 소득과 달리 수치 자체도 10분위 분배율은 소득에 비하여 높고 Wolfson 양극화 지수는 낮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전후로도 특별한 추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 분기 큰 변동 없이 규칙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층

면의 양극화는 소득 측면의 양극화에 비하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도와 Wolfson지수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일부 연도만을 예외로 한다면 소득 및 지출불평등도와 Wolfson지수는 추세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지출분배구조가 세부항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10가지 세부항목, 즉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에 대하여 10분위 분배율과 Wolfson 양극화 지수를 구해보았다. 우선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살펴본 지출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Wolfson의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추이



주: 실선은 Wolfson 양극화지수이고, 점선은 Gini계수임.

첫째, 광열수도는 최저 1.3에서 최고 1.6수준으로 경제위기 기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계절적인 변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 항목 역시 광열수도보다 분배율 수치가 다소 낮지만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1.3 수준에서 분기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경제위기 직전 분기에서 1997년 4분기로 갈 때 분배율 수치가 올라가서 양극화와 다른 추세를 보였지만 1998년 들어서는 분배율 수치가 4개 분기 연속하여 낮아져서 해당 항목의 지출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식료품은 분배율수치가 거의 1 정도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7년 4분기에는 3분기에 비해 오히려 지출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1998년에는 3개 분기 연속 분배율 수치가 낮아져서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4분기 이후에는 다시 1.2 수준으로 높아져서 식료품 지출액의 양극화는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넷째, 주거항목은 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의 주거관련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 항목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점차 분배율수치가 하락추세를 보여주어 계층간 지출금액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인해 지출양극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2001년 이후부터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제위기 이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상당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가구, 냉장고 등의 가정용 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등을 의미하는 가구가사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가구가사항목을 살펴보면 지출금액의 양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 역시 경제 위기 이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섯째, 교양오락은 1998년 2분기를 분기점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교양오락항목은 특이하게 경제위기 직후 분기에 분배율 수치가 커져서 해당항목 지출금액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이는 상위소득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양오락 관련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교육항목은 절대적인 수치가 다른 지출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미 지출금액의 소득계층간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분배율 수치가 더 떨어져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비지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여덟째, 피복 및 신발관련 지출은 분배율 수치가 1보다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경제위기로 인해 1997년 4분기, 1998년 1·2분기 등 총 3개 분기에서만 분배율 수치가 미미하게 하락하여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을 기점으로 분배율 수치가 하락한 이후부터는 점차 추세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지출금액의 소득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2002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통신 지출은 경제위기 기간에도 분배율 수치가 높아져서 소득계층간 해당 지출항목의 양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1분기 이후 잠시 분배율 수치가 하락하여 계층간 지출격차가 커졌지만 이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분배율 수치는 2001년 4분기부터 0.9를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최근의 이동전화 관련지출이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의 추세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대 지출항목 중 10분위 분배율 값이 1이 넘는 항목은 식품,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등이었고, 1 이하인 항목은 교육, 교양오락, 피복신발, 교통통신, 기타 등이었다. 이는 세부항목별로도 소득과 달리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특정 항목이 기여한 것이 아니며 소비의 구조 자체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IV. 소득 및 지출 분배구조 괴리의 원인 분석

소득분배구조와 지출분배구조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선형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0) 다만, 2002년에는 2개 분기에서 잠시 분배율 수치가 높아져서 교육비지출의 계층 간 격차가 다소 축소된 적도 있었다.

11) 지면관계상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Wolfson 지수를 이용하더라도 분석 결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3〉 소득 불평등도(근로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상수항	0.2832** (0.0022)	0.2843** (0.0018)	0.7051** (0.0087)	0.7034** (0.0069)
추세변수	0.0010** (0.0001)	0.0010** (0.0001)	-0.0044** (0.0002)	-0.0044** (0.0002)
실업률	0.0016** (0.0006)	0.0015** (0.0005)	-0.0086** (0.0021)	-0.0085** (0.0016)
IMF 더미	-0.0117** (0.0027)	-0.0114** (0.0022)	0.0356** (0.0117)	0.0345** (0.0092)
1분기 더미	0.0072** (0.0021)	-	-0.1843** (0.0077)	-
2분기 더미	-0.0058** (0.0019)	-	0.2261** (0.0085)	-
3분기 더미	0.0033 (0.0021)	-	-0.0125 (0.0064)	-
수정된 R^2	0.9040	0.9051	0.9265	0.9337
RMSE	0.0045	0.0042	0.0169	0.0154
F-통계량 (p-값)	62.21 (0.0000)	125.05 (0.0000)	82.91 (0.0000)	184.10 (0.0000)

주: 괄호 내의 수치는 bootstrap 방법(반복회수 10,000)을 이용하여 구한 표준오차이며, *와 **는 각각 5% 및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 지니계수 추정식의 시간추세항은 0.001로 양(+)의 값을 가지며, 1%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분위 분배율의 시간추세항 계수는 -0.0044이며 이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 대한 지니계수의 경우 추세변수의 기울기가 음(-)으로 나타나고 또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출분배 구조 불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소비지출에 대한 10분위 분배율의 시간추세항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분배상태는 악화되었지만 지출 분배상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소비 불평등도(소비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상수항	0.3055** (0.0054)	0.3104** (0.0049)	0.9875** (0.0178)	0.9596** (0.0131)
추세변수	-0.0010** (0.0001)	-0.0010** (0.0001)	-0.0001 (0.0005)	-0.0001 (0.0004)
실업률	0.0008 (0.0010)	0.0008 (0.0008)	0.0055 (0.0035)	0.0053 (0.0031)
IMF 더미	-0.0045 (0.0047)	-0.0045 (0.0039)	-0.0037 (0.0154)	-0.0032 (0.0107)
1분기 더미	0.0029 (0.0038)		-0.0482** (0.0128)	
2분기 더미	0.0105* (0.0045)		-0.0280 (0.0178)	
3분기 더미	0.0072 (0.0042)		-0.0400* (0.0153)	
수정된 R^2	0.6130	0.6142	0.1778	-0.0008
RMSE	0.0090	0.0087	0.3324	0.0316
F-통계량 (p-값)	11.29 (0.0000)	21.35 (0.0000)	2.41 (0.0487)	0.99 (0.4086)

주: 괄호 내의 수치는 bootstrap 방법(반복회수 10,000)을 이용하여 구한 표준오차이며, *와 **는 각각 5% 및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그렇다면 왜 소득구조의 불평등도는 크게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출구조의 불평등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또한 양극화 측정기준으로 사용한 10분위 분배율과 Wolfson 양극화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 소득구조의 양극화 현상은 악화되면서 심화되고 있음에 반해, 지출구조의 양극화현상은 그 정도가 훨씬 적은 것인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소득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중간소득계층의 일부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중간소득계층은 5.5% 감소하였으며 그 중 2/3은 저소득계층으로, 1/3은 고소득계층으로 옮겨갔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출측면을 10분위 분배율과 Wolfson 양극화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시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이지 않았으며,

동시에 고소득층도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생애주기 소비이론에 따르면 소비는 평평한 형태를 띠므로, 중간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그들의 이전 소비행태를 유지하려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소비행태가 트레이딩 업(trading-up) 현상¹²⁾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소비행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고소득층은 소득이나 수입의 증가를 소비가 아닌 저축(또는 투자) 증대에 충당하였을 수도 있다.

이 점은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유경원·조은아(2006)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계층별 저축률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계층에게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이들 계층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소득 계층별 저축률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 상위 30% 계층의 저축률은 1997년 37%에서 2004년 1분기 35%로 2% 포인트 감소에 그쳤으나,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중위 40% 계층의 저축률은 27%에서 15%로 12% 포인트 낮아졌고, 소득 하위 30% 계층의 저축률은 9%에서 -12%로 무려 21% 포인트나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 조영무(2004)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의 하위 10%와 사업자가구의 하위 30%는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약 저소득층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비를 유지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저축을 계속 늘려간다면 앞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¹³⁾

12) 가격에 상관없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것을 소비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13) 아쉬운 것은 가계조사자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계조사 연간자료에 있는 '기타 수입'과 '기타 지출' 항목이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두 조사항목은 가계조사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자료로서 가계의 전체 자산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두 조사항목을 활용하여 자산·부채 현황을 파악하거나 계층별 자산 격차의 심화 여부를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06. 6. 26).

V. 결 론

지금까지 소득 및 소비의 분배구조와 함께 소득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고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및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가계조사』 분기별 소득 및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그리고 Wolfson의 양극화지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경제위기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계 및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여 소득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양극화 측정지표중 하나인 소득기준 10분위 분배율 역시 점차 악화되었는데, 그 중에서 근로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의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결과임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지출기준으로 측정한 10분위 분배율은 경제위기가 존재하는 기간에 일부 변화가 있었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소득양극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출측면 10분위 분배율 분석결과는 10대 세부지출항목별 분석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광열수도, 보건의료, 주거 및 식료품 관련 지출항목들은 10분위 분배율 수치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1을 전반적으로 초과하여 소득계층간 지출 양극화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의료, 주거 등은 약간씩 하락추세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지출양극화 현상이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분위 분배율이 절대적으로 1보다 낮거나 추세적으로 1보다 낮아지고 있는 항목들은 교양오락, 가구가사, 교육, 피복신발, 교통통신, 기타 항목이었다. 이들 지출항목의 10분위 분배율 값이 1보다 낮으므로 앞서 살펴본 항목들과 달리 소득계층간 지출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교통통신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10분위 분배율 수치가 증가하여 소득계층간 지출금액 양극화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상위 20% 계층과 하위 40%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하위 40%계층이 상위 20%계층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자산처분이나 미래소득을 담보로 하거나 또는 친지들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지출을 충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다섯째, Wolfson 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더라도 10분위 분배율에서 얻은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득 분포형태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감소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중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160%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가구의 규모는 표본전체의 약 5.5%에 해당한다. 감소한 가구 중 약 2/3는 저소득층으로, 그리고 1/3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1995~2005년 기간 중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소득양극화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정도 역시 악화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반면 소비 측면의 양극화는 원천적으로 존재하나 확대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계층간 지출항목별 불평등상태는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의 진전, 그리고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향후 소득분포는 장기적으로 양봉형(twin-peak)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이며(안종범 외, 2002; 홍순영, 2000), 이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나 소비의 양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와 같은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나, 고용연계형 복지정책이 향후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이 『도시가계조사』 또는 『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자 외에도 무직자 및 실직가구 등이 배제되었으며, 연도별 자료가 동일한 가구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지출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전 기간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향후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 및 양극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고령화와 소득분배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1. 강성호 · 임병인, “공적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가구특성별 접근,” 『경제분석』, 제11권 제2호, 2005. 6, pp.135-163.
2. 김재광 · 한근식 · 윤연옥, “가계조사 무응답 처리기법 연구,” 『통계연구』, 제9권 제1호, 2004, pp. 79-102.
3. 김준영 · 이광호, “경기변동의 소득 및 소비불평등 파급효과: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18집 제2호,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2004. pp. 3-21.
4. 김준영 · 임병인, “IMF 충격의 불평등파급효과,” 『공공경제』, 제6권 2호,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2001. pp. 3-31.
5. 김진영, “대우패널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2002, pp. 47-74.
6.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6. 4. 5, 제547호.
7. 박성준,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2000, pp. 61-80.
8. 성명재, 『소득 분배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1,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신동균,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KLI 노동리뷰』, 2005, pp. 63-80.
10. 신동균 · 전병유,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 pp. 77-109.
11. 안종범 · 김철희 · 전승훈,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0권 제1호, 2002, pp. 75-95.
12. 유경원 · 조은아,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66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13. 이정우 · 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제7권 2호, 국제경제학회, 2001, pp. 79-109.
14. 임병인, 『KGSS 자료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 분석』, 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5. 5.
15. 조성원, “외환위기 이후 소득 5분위 배율의 구조적 변화,” 『재정논집』, 제20집, 제1호, 2005, pp. 93-109.
16. 조영무, “저축률의 빈부격차 확대,” 주간경제 789호, LG경제연구원, 2004. 7. 16.
17. 최바울 · 김성환, “경제위기와 불평등: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 『제4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18.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2호, 국제경제학회, 2002, pp. 1-20.
19. 통계청 보도자료, 2006. 6. 26.
20. 홍두승, 『한국의 증산층』, 서울대학교 한국학 모노그래프, 27,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1. 홍순영, 『한국경제의 디지털화와 파장』, 삼성경제연구소, 2000.
22. Esteban, Joan-Maria and Debraj Ray,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No. 4, 1994, pp.819-851.

23. Foster, James E. and Michael C. Wolfson,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mimeo, Vanderbilt University, 1992.
24. Johnson, David S., Timothy M. Smeeding, and Barbara B. Torrey, "Economic Inequality through the Prizm of Income and Consumption," *Monthly Labor Review*, April 2005, pp. 11-24.
25. Thurow, Lester,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The New York Times*, Feb. 5, 1984. Section 3, p.2.
26. Wolfson, Michael C., "When Inequality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4, No. 2, 1994, pp.353-358.

〈부표 1〉 소득·소비 분배구조(경상소득과 소비지출)

구분		경상소득			소비지출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Wolfson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Wolfson
1995	1분기	0.2743	0.6064	0.2400	0.1775	0.9206	0.1271
	2분기	0.2641	0.6487	0.2278	0.1738	0.9662	0.0987
	3분기	0.2682	0.6295	0.2347	0.1835	0.9166	0.1032
	4분기	0.2738	0.6297	0.2365	0.1715	0.9756	0.1049
1996	1분기	0.2819	0.5820	0.2475	0.1950	0.8416	0.1300
	2분기	0.2725	0.6365	0.2362	0.1899	0.8966	0.1184
	3분기	0.2775	0.6130	0.2477	0.1840	0.9003	0.1078
	4분기	0.2785	0.6142	0.2429	0.1729	0.9389	0.1200
1997	1분기	0.2826	0.5971	0.2466	0.1851	0.8934	0.1207
	2분기	0.2649	0.6492	0.2275	0.1941	0.8974	0.1122
	3분기	0.2740	0.6205	0.2407	0.1946	0.8769	0.1058
	4분기	0.2636	0.6394	0.2349	0.1700	0.9635	0.1030
1998	1분기	0.2954	0.5733	0.2537	0.1915	0.9027	0.1190
	2분기	0.2816	0.5964	0.2473	0.1894	0.8928	0.1061
	3분기	0.2977	0.5475	0.2671	0.2055	0.8171	0.1195
	4분기	0.2858	0.5746	0.2575	0.1822	0.9184	0.1173
1999	1분기	0.2985	0.5421	0.2634	0.1917	0.8832	0.1406
	2분기	0.2931	0.5791	0.2474	0.1726	0.9438	0.1112
	3분기	0.3011	0.5459	0.2723	0.1939	0.8913	0.1201
	4분기	0.2925	0.5727	0.2601	0.1668	0.9946	0.1263
2000	1분기	0.2937	0.5685	0.2601	0.2010	0.8716	0.1448
	2분기	0.2818	0.6011	0.2435	0.2002	0.8519	0.1104
	3분기	0.2858	0.5855	0.2529	0.1842	0.9397	0.1192
	4분기	0.2934	0.5748	0.2633	0.1889	0.8943	0.1268
2001	1분기	0.3052	0.5446	0.2760	0.1900	0.8916	0.1452
	2분기	0.2849	0.5995	0.2527	0.1990	0.8783	0.1206
	3분기	0.2912	0.5741	0.2602	0.1962	0.8964	0.1386
	4분기	0.2926	0.5605	0.2663	0.1729	0.9555	0.1160
2002	1분기	0.2924	0.5755	0.2569	0.1894	0.9088	0.1387
	2분기	0.2826	0.5970	0.2473	0.1798	0.9231	0.1162
	3분기	0.2884	0.5725	0.2610	0.1796	0.9486	0.1237
	4분기	0.2913	0.5559	0.2629	0.1898	0.9164	0.1171
2003	1분기	0.3003	0.5533	0.2604	0.1880	0.8957	0.1259
	2분기	0.2832	0.5908	0.2473	0.1771	0.9517	0.1057
	3분기	0.2939	0.5518	0.2651	0.1876	0.8958	0.1109
	4분기	0.2972	0.5506	0.2654	0.1771	0.9248	0.1129
2004	1분기	0.3035	0.5375	0.2717	0.1933	0.8696	0.1307
	2분기	0.2848	0.5736	0.2556	0.1844	0.8961	0.1103
	3분기	0.2979	0.5272	0.2774	0.1946	0.8777	0.1209
	4분기	0.3019	0.5226	0.2754	0.1813	0.9148	0.1166
2005	1분기	0.3031	0.5239	0.2716	0.1964	0.8479	0.1314
	2분기	0.2855	0.5696	0.2511	0.1808	0.9316	0.1024
	3분기	0.2965	0.5330	0.2721	0.1990	0.8569	0.1191
	4분기	0.2920	0.5361	0.2703	0.1785	0.9255	0.1075

A Study on the Trend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Income and Consumption in Korea: 1995-2005

Sang-Ho Nam* · Byung In Lim**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distributions of the income and/or the expenditure of urban workers for periods of 1995-2005 using Gini index,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and the Wolfson's polarization index.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 and the Wolfson's polarization index, we have experienced 'shrinking middle class' as well as 'bi-polarization of income' in Korea. Second, according to Gini indexes, distributions of the current income and the labor income have been deteriorated in the post-crisis period, whereas those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howed some improvement. Third,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and the Wolfson's index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come polarization has worsened seriously in the post-crises period, whereas that of the expenditure was not observed.

Key Words: income distribution, Gini index, polarization, decile distribution ratio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